

#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참가신청 QR코드



일시 : 2026. 5. 12.(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

주관 : 한국사회연대경제

발제 1) 2027년 정책 및 예산 수립 방향 제안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발제 2)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지영 소장

현장토론 현장 사회연대경제 참석자

종합토론 좌장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권영우 과장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이정윤 과장







##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 개회 · 내빈 소개	
14:05~14:20	· 인사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현배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대표	
14:20~14:25	· 사진촬영	
14:25~14:55	· 2027년 정책 및 예산 수립 방향 제안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4:55~15:30	· 현장토론 좌장 : 한양대학교 김종걸 교수	
15:30~15:50	· 종합토론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권영우 과장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이정운 과장	
15:50~15:55	· 폐회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 인사말



# 인사말

##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복기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개최되는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으로 빚어내기 위해 토론회 개최로 애써주신 한국사회연대경제 관계자 여러분과 전국의 사회연대경제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의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언어입니다.

저는 지난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부활을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 118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또한 전년 대비 4배 이상인 1,18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격상시키고,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예산으로 반영된 성과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선택이 아닌 마땅한 국가적 의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경쟁보다 연대를 우선하는 사회연대경제야말로 대통령이 강조하신 포용금융을 현장에서 구현할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2027년도 예산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까지 온기가 흐르게 하는 포용의 통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2026년이 삭감되었던 예산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전환점’이었다면, 2027년은 행안부와 고용부뿐만 아니라 정부 곳곳에 흩어진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대폭 확대하는 ‘도약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될 현장의 제안들을 나침반 삼아,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서 국회 예산 심의의 최전선에서 202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따뜻한 포용의 시대는 우리가 함께 손잡고 만드는 정책과 예산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5. 12.

국회의원 복기왕

# 인사말



한국사회연대경제  
이현배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대표 이현배입니다.

오늘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국회와 정부 관계자, 현장 활동가, 연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소멸과 돌봄 위기,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시장 중심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앞둔 지금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정책 체계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예산 확대,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연대경제는 돌봄, 주거, 에너지전환,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은 현장의 필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했고,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예산 축소로 지역 현장의 기반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돌봄과 주거, 먹거리, 에너지전환, 생활서비스와 같은 과제는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안에서 실행되고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기본사회 역시 국가 재정과 공공서비스만으로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 기반의 공공적 경제 조직이 함께 작동할 때 지속가능한 기본사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적 인프라이자 정책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고, 국회·정부·현장이 함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2027년 정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지역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 발제

##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 □ 제안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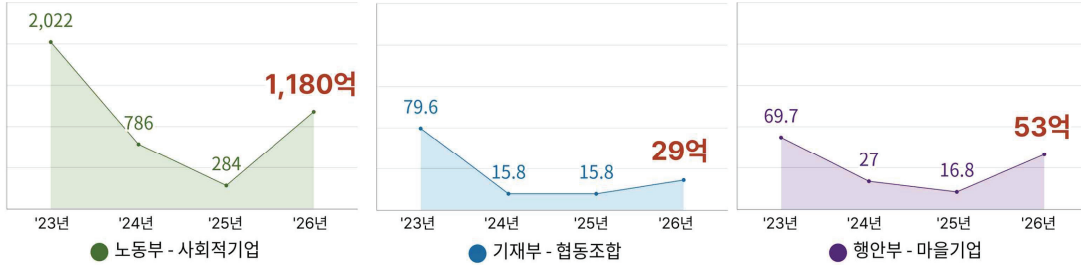
- 본 제안은 2027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이에 선정된 과제는 첫째, 기존 정책 중 예산이 확대 될 필요가 있는 사업 둘째,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 제안하고 자 함
- 따라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예산 사업(제도개선 과제)은 제안에서 제외하였음

### □ 사회연대경제 예산관련 현황

- 2027년 예산안 편성 계획
  -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음
  -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기조에 따라 2027년 예산 규모는 약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예산 현황
  - 2026년 사회연대경제를 담당하는 주요부처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은 사회연대경제의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118, 기재부가 29.5억, 고용부가 1,180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예산의 절반 수준 임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요부처별 예산('23년~'26년)>

(단위: 억 원)



- 한편, 광역 17개 시·도와 기초 226개 시·군·구, 모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집행하는 연간 재정 규모는 2025년 기준 약326조원 규모로 정부 편성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 전체 예산(2019~2025)

단위 : 백만원

지역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19-'25	'22-'25
합계	262,850	319,281	328,951	337,189	310,545	192,074	101,914	-14.6%	-32.9%
평균	15,462	18,781	19,350	19,835	18,267	11,298	5,995	-14.6%	-32.9%
서울	58,870	64,440	58,377	38,421	24,032	14,617	16,809	-18.9%	-24.1%
부산	12,351	12,705	13,353	15,018	14,315	6,514	1,925	-26.6%	-49.6%
대구	13,175	19,007	25,012	24,849	15,080	5,348	2,077	-26.5%	-56.3%
인천	8,941	9,233	9,828	10,713	11,135	5,202	2,141	-21.2%	-41.5%
광주	12,062	11,629	11,704	12,634	15,720	12,389	5,146	-13.2%	-25.9%
대전	7,149	16,890	23,090	26,136	35,946	29,529	14,719	12.8%	-17.4%
울산	7,594	8,394	7,849	8,443	8,018	2,632	412	-38.5%	-63.5%
세종	3,970	3,884	4,501	4,276	4,119	2,393	779	-23.8%	-43.3%
경기	30,759	40,520	26,679	28,170	41,550	36,566	32,484	0.9%	4.9%
강원	10,979	10,856	12,416	23,025	26,727	8,625	825	-35.0%	-67.0%
충북	4,713	6,636	7,219	8,023	9,419	2,791	761	-26.2%	-54.4%
충남	3,160	8,314	18,614	19,129	26,821	22,091	4,328	5.4%	-39.1%
전북	20,231	28,700	29,931	36,259	20,405	11,178	4,906	-21.0%	-48.7%
전남	10,628	12,065	12,882	13,774	14,693	8,955	3,443	-17.1%	-37.0%
경북	32,155	31,597	26,444	25,130	22,827	9,596	3,420	-31.2%	-48.6%
경남	19,122	25,649	32,276	32,909	9,321	5,976	3,630	-24.2%	-52.0%
제주	6,991	8,763	8,775	10,279	10,417	7,670	4,109	-8.5%	-26.3%

출처 : 2019~2024년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변화가 지자체 예산과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미친 영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25) 참고, 2025년 예산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서 별도 추출

-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생력 확보를 명분으로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였고,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예산도 22-25년 약 33%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국정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한 바,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국정과제(연번, 과제명, 주관부처)		연계성 설명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민관협력체계 등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li> <li>▶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 성장지원 강화</li> </ul>
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가·자활기업·협동조합이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참여 가능</li> <li>▶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정책과 연계</li> </ul>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은 협동조합·마을기업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모델과 직접 연관</li> </ul>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발전 (행안부/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발전 거점 육성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혁신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 가능</li> <li>▶ 지역재생·도시재생 사업과의 높은 연계성</li> </ul>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활용, 고향사랑기부물품 지정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활용 등 연계 가능</li> </ul>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모두 돕는 골목상권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상권 재생, 지역기반 유통구조 개혁 주체로 활용 가능</li> <li>▶ 사회연대경제 공동브랜드, 공동구매·판매 등 스케일업</li> </ul>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모델을 통해 1인 가구·고령자·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주거복지 실현</li> </ul>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분야 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이 농업생산·유통의 실 주체</li> <li>▶ 농산물 공동유통·온라인 직거래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li> </ul>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영농법인, 농민협동조합 등 형태로 농가 위험 분담 가능</li> <li>▶ 청년농 사업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반 세대전환 모델'로 발전 가능</li> </ul>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협동조합·마을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 가능</li> <li>▶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모델로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li> </ul>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주체로 참여</li> <li>▶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역할 가능</li> </ul>
89	청년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 생활 지원 (국조실/교육부/행안부/문체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과 연계 가능</li> <li>▶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청년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li> </ul>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층 돌봄·스마트돌봄서비스 등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결합하여 새로운 돌봄 일자리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가능</li> </ul>

□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관련 제안

1. 돌봄

-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Aging In Place) 지역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추진 중에 있음
- 2027년 돌봄분야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요구 사항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돌봄 참여 제도화 및 우선 위탁' 이라고 하겠음. 다만, 이번 제안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사업과 예산 제안에 있음

□ (신규) 지역사회 통합돌봄 케어코디네이터(케어매니저) 육성 사업 (복지부)

- 다학제 판정·개인별 지원계획·정기 사례관리는 훈련된 케어매니저 없이 작동 불가
- 이에 (의료·복지·요양 분야 종사자 대상) 지역 내 다학제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과정 운영
- 향후 교육수료생을 읍면동 돌봄통합지원센터 케어매니저로 단계적 배치

□ (신규) 경로당 먹거리 돌봄 위탁 시범 사업 (복지부)

- 경로당은 고령자 일상 공간이지만 돌봄통합지원법·복지부 로드맵 상 경로당 활용 구체 계획 없음
- 지역 내 시범 경로당 선정,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위탁하여 먹거리 돌봄 운영
- 이를 통해 기존 단순 급식 지원을 넘어 식사 + 안부 확인 + 건강 모니터링 등 통합 돌봄 모델 수행

## 2. 먹거리돌봄

### □ (신규) 농촌마을 푸드트럭 사업 (농식품부, 행안부)

- 농촌 지역 등 식품 소매점이 부족한 ‘식품 사막(Food Desert)’ 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싣고 찾아가는 푸드트럭 운영
- 생협 및 사회적경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배달을 넘어 안부 확인 등 ‘먹거리 돌봄’ 기능 수행
- 이동형 푸드마켓 특수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3. 사회주택

### □ (기존) 특화 공공임대 입주자 맞춤형 운영 활성화 사업 (국토부)

- 정부는 특화 공공임대를 통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양육가구, 산업단지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돌봄·복지·일자리·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을 결합하는 정책 확대 중
- 다만, 특화 공공임대의 성패는 주택 자체보다도 돌봄공간, 복지시설, 커뮤니티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 입주자 맞춤형 운영이 핵심이라고 하겠음
- 그러나 현행제도는 건설형에 한해 건설비 지원이 도입되는 수준으로, 매입임대형 특화주택에도 돌봄, 복지, 커뮤니티 시설 설치비 지원
- 동시에 입주자 맞춤형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조합원 모집, 교육 등) 지원

#### 4. 에너지 전환

##### □ (신규)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사업 (기후부, 행안부)

- 기업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환에 비해 주민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정책목표 달성에 속도를 보장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거나 참여자의 숫자에 비추 재생에너지 확대를 돌일킬 수 없는 비가역적 상황으로 만든다는데 의의가 있음
- 이에 속도도 중요하나 에너지 전환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을 위한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 지원

#### 5. 지역순환경제

##### □ (신규)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행안부)

- 공공 조달시장 내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범사업 및 홍보, 확산 전략 추진
- 지역 소재 중견기업 및 대기업 자회사 등이 지역생산 농산물 구매,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및 소비 촉진
- 광역시·도 5개 지역(개별 5억 이내), 기초자치단체 10개 지역(개별 3억 이내) 최대 3년 이내 지원
- 사업추진과 동시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역별 CWB 사례를 통한, 지역 내 고용유발 효과, 지역의 순환경제 지표개발, 지방정부 생존전략으로서 정책 고도화 추진

## 6. 사회연대 금융

### □ (신규) '사회가치연대투자 모펀드' 조성 (행안부, 금융위, 재경부)

- 2030년까지 에너지, 돌봄, 주거 등 사회연대경제 전략 분야의 자금 수요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되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함
-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은 일반 기업과 다른 재무적 특성(배당 제한 등)을 가지나, 기존 금융권의 여신 관행으로는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음
- 민간 자본과 자조 기금(공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마중물(Catalytic Capital)' 역할이 필수적임
- 1조 원 규모 '사회가치연대투자 모펀드' 조성
  - 구조 :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공 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및 민간 자본을 매칭하여 총 1조 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
  - 운용 : 에너지 전환, 사회주택, 돌봄 특구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기업 성장 단계별 투·융자 지원

### □ (기존/신규)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전용 기금 설치 (행안부, 금융위, 재경부)

- 사회적 투자자 개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지역 수요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지원 등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목적으로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전용 기금 운용
- 기 설치된 지자체 기금의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내자본',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촉매자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목적과 원칙 정비

### □ (신규) 기업공제·자조기금 등 민간기금 조성 매칭 지원 사업 (행안부, 금융위, 재경부)

- 기업공제·자조기금은 검증된 방식이나 초기 자금 부족과 규모화 한계로 확산이 제한적임

- 이에 민간의 자조기금에 공공 매칭 지원 구조를 제도화하여 지역 금융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자조기금 조성액 대비 1:3 매칭 구조로 지역 금융 기반 구축

## 7. 디지털·AI

### □ (신규) 사회연대경제 디지털, AI 전환 지원 사업 (과기부, 중기부)

- 사회연대경제 기업 디지털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역량이 부족한 현장 조직이 기술 협동조합의 솔루션(SaaS, AI 도구 등)을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디지털 전환 바우처' 제공

### □ (신규) 플랫폼 협동조합 육성 및 공동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과기부, 중기부)

- 배달, 가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분야에서 노동자와 이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초기 앱(App)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위한 R&D 지원

### □ (신규) 공익 데이터 신탁(Data Trust) 및 활용 체계 구축 사업 (행안부, 중기부)

- 돌봄, 에너지 등 사회연대경제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공공재'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 의료·돌봄(라이프로그), 에너지(발전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협동조합' 또는 '신탁 기구' 설립 시범사업 추진

## 8.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 (신규) 사회연대경제 업종형/기능형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사업 (행안부)

- 돌봄, 에너지, 자원순환, 디지털 전환(DX), 사회적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연합회 또는 전문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기술 지원, 교육, 정책 대응, 네트워크 구축,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 조직 운영 사업 시행
- 광역 단위 전문 유통조직 설립을 통해 개별 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 ‘무한상사’ 사례와 같이 상품 개발, 마케팅, 계약, 납품을 대행하는 기능형 중간지원조직(사회적협동조합 등)을 17개 시·도에 설립 및 육성

### □ (신규) 사회연대경제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교육부, 중기부)

-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의 국비 훈련 대신,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필요한 직무 교육(회계, 마케팅, AI 활용 등)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전용 교육 바우처 지원

## 9.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연구과제 제안

- 1) 사회연대경제 공공조달 구조 분석 및 지역순환경제 연계 전략 연구
  - 지자체별 공공조달 계약 구조, 품목별 발주 현황, 참여 기업 유형 등을 분석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진입 가능 분야와 제도적 제약 요인을 도출하고, 전문상사·지역순환경제 모델과 연계한 공공조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함
- 2) 전국 단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진단 및 활성화 지수 개발 연구
  -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기업 수, 매출, 조직 역량, 조례·예산·전담조직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제시함

3)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 및 중간지원조직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

- 중앙-광역-기초-중간지원조직-연합회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업종·기능별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유형화 모델 및 중간지원조직 전문화 운영 방안을 도출함

4) 에너지·돌봄·주거 등 전략 분야 사업 모델 성과 분석 및 확산 연구

- 햇빛발전, 통합돌봄, 사회주택 등 주요 전략 분야 사업의 재무성과, 사회적 성과, 고용 효과 등을 분석하고, 표준 사업 모델 및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함

5) 사회연대경제 데이터 활용 및 정책 평가 체계 구축 연구

-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경영·성과·돌봄·에너지 데이터를 표준화·통합·분석하여 정책 효과성 측정, 성과 관리,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통합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를 구축함

6) 사회적금융 및 임팩트 투자 연계 구조 고도화 연구

- 정책금융, 사회적금융, 민간 임팩트 투자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모펀드·임팩트 계정·보증제도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 모델을 설계함

7) 사회연대경제 인재양성 및 전문인력 육성 체계 구축 연구

- 에너지·돌봄·자원순환·디지털 등 전략 분야별 핵심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 기반 인재 양성 체계를 설계하고, 교육과정, 자격 인증, 경력 경로(Career Path), 현장 연계 훈련 모델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함

## 10. 마치며

- 미래의 한국 사회연대경제는 의(돌봄), 식(먹거리), 주(사회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 관련된 문제와 에너지, 지역소멸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역사회)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자가 되고자 함

- 이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의제중심으로 연대와 협력하면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할 구상을 하고 있음
- 모두의 기대처럼 사회연대경제가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 발제

##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지영 소장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2026. 05. 12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정지영 소장





# 목 차



I. 분석 개요 .....	29
II. 중앙정부 사회연대경제 예산 변화 .....	31
III.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예산 변화 .....	35
1. 광역지자체 .....	35
2. 기초지자체 .....	40
IV.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요 추정 .....	45
V. 부록 : 기초 지자체별 사회연대경제 예산 .....	55



## 1. 분석 개요

### □ 분석 배경 및 목적

-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2022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큰 폭의 축소를 경험하였으나, 2026년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회연대경제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의제에 다시 포함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단순히 과거에 축소된 예산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 단위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임
-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 생활서비스, 주거,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금융 등 주요 정책 과제는 중앙정부 정책만으로 완결되기 어렵고, 실제 실행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 그동안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부처별 예산서와 사업설명자료 등을 통해 비교적 확인이 가능했던 반면, 지방정부 예산은 사업명, 재원 구조, 지원대상, 사업유형이 지자체별로 달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은 지방정부이므로, 중앙정부 예산 변화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예산과 현장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분석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예산 변화를 살펴보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재원 구조, 자체 예산 변화, 사업유형 별 예산 흐름을 검토함
- 나아가 제9회 지방선거 사회연대경제 9대 정책 요구과제를 기준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를 개략적으로 추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분석 범위 및 자료

- 본 분석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 첫째,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 분석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앙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연대경제 주요사업 안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함.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업, 소셜벤처 등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관련 사업을 식별하였으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함.
- 둘째,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예산 분석은 지방재정365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을 추출·정리함. 예산은 전체 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체 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사업명 키워드를 기준으로 인건비, 사업개발, 지원기관, 창업·설립, 기금·투융자 등 주요 사업유형별 예산도 함께 검토함.

- 셋째, 지방정부 예산 수요 분석은 제9회 지방선거 사회연대경제 9대 정책 요구과제를 기준으로 수행함.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사회서비스, 생활서비스, 주거, 지역순환경제, 디지털, 사회적금융, 인재양성·교육·연구, 생태계 및 지원체계 혁신 등 9대 분야별 세부 과제에 대해 사업량과 단가를 설정하고,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4년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총사업비를 추정함.

## □ 분석 방법 및 해석 유의사항

- 본 분석의 중앙정부 예산 집계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직접 지원하거나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함. 다만 사회연대경제가 일부 포함된 일반사업의 경우 실제 수혜 규모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예산 규모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함
- 또한 펀드, 보증, 대출 등 금융지원형 예산은 명시된 예산 규모와 실제 현장 수혜 규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예산 변화 분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사업지원형 예산을 중심으로 검토함
- 본 분석의 지방정부 예산 집계는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료를 활용하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업, 소셜벤처 등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관련 사업을 추출한 뒤, 중복 사업 및 비관련 항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리함
- 다만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지자체별로 사업명, 부서명, 예산 편성 방식, 지원대상 표기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산출한 사회연대경제 예산 규모는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거나 별도로 집계하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각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예산의 확정적 규모라기보다, 공개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의 변화 흐름과 재원 구조, 사업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추정치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최종적인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세부 예산서, 사업설명서, 담당부서 확인 등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함

## II.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 변화

### 1 총괄 예산

-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직접사업 예산은 2022년 3,127억 원에서 2025년 577억 원으로 감소하여, 3년 사이 약 2,550억 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2년 대비 약 81.5%가 감소한 수준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중앙정부 재정 기반이 단기간에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줌
- 2026년에는 중앙부처 예산이 1,591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014억 원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2년 예산의 약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2026년 예산 증가는 일정한 회복 흐름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과거 수준의 재정 기반을 충분히 복원했다고 보기 어려움

표 3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부처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감액 ('25-'22)	증감액 ('26-'25)
합계	312,723	293,396	126,320	57,741	159,143	-254,982	101,402
기재부	7,364	7,500	1,580	1,580	3,130	-5,784	1,550
교육부	625	500	0	0	0	-625	0
과기부	1,293	1,272	636	509	509	-784	0
행안부	12,089	10,465	2,695	1,675	17,089	-10,414	15,414
문체부	22,225	6,968	500	0	0	-22,225	0
농식품부	8,002	11,102	9,934	8,541	8,585	539	44
산림청	9,560	8,550	2,390	1,291	0	-8,269	-1,291
산업부	31,124	21,000	9,440	0	0	-31,124	0
중기부	27,370	22,021	15,440	15,733	11,658	-11,637	-4,075
기후부	1,200	1,300	680	0	0	-1,200	0
고용부	190,545	202,464	83,025	28,412	117,972	-162,133	89,560
성평등부	234	254	0	0	0	-234	0
복지부	930	0	0	0	0	-930	0
국토부	162	0	0	0	200	-162	200

주1 : 본 분석은 사회연대경제 조식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예산만을 집계한 것으로, 펀드·보증·대출 등 금융사업 및 사회연대경제가 일부 포함된 일반사업은 제외함. 이는 해당 사업을 포함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정책 규모가 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임

주2 :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일몰된 경우는 예산을 '-'로 표기하였으며, 사업은 존재하나 비예산 사업인 경우 예산을 '0'으로 표기

자료 :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도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각 중앙부처, 연도별)

- 부처별로 보면, 2022~2025년 예산 축소는 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행안부, 중기부 등 주요 부처에서 동시에 나타났음. 특히 고용부 예산은 2022년 1,905억 원에서 2025년 284억 원으로 감소하여 전체 예산 축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및 혁신성장 관련 예산, 문체부의 문화·관광 분야 사회연대경제 예산도 대부분 축소 또는 종료된 것으로 파악됨
- 2026년 예산 증가는 주로 고용부와 행안부 예산 확대에 의해 발생하였음. 고용부 예산은 2025년 284억 원에서 2026년 1,18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행안부 예산도 17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중기부, 산림청, 문체부, 산업부 등 일부 부처의 예산은 여전히 축소되거나 편성되지 않아, 회복이 특정 부처와 일부 사업에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종합하면,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2022년 이후 급격한 축소를 경험한 뒤 2026년에 일부 회복되었으나, 회복 수준과 부처별 균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확인됨. 향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년도 반등을 넘어, 부처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중기적 예산 복원이 필요함

## 2 사업별 예산

- 세부 사업별로 보면,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단순히 전체 규모가 축소된 데 그치지 않고, 사업 구성 자체가 크게 재편된 것으로 나타남. 2022~2023년에는 사회적기업 인건비·사업개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혁신타운, 협업체계 구축, 관광두레,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부처 사업이 병행되었으나, 2024년 이후 다수 사업이 종료되거나 대폭 축소되면서 정책 영역이 크게 좁아졌음
- 특히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및 혁신성장 사업, 문체부의 문화·관광 분야 사회연대경제 사업, 중기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및 소셜벤처 육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범위가 산업·문화·창업·지역혁신 영역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됨. 이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산업, 문화관광, 혁신창업과 연결하던 정책 기반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 반면 2026년 예산 회복은 주로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행안부의 신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2025년 284억 원에서 2026년 859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행안부 역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을 신규 편성하면서 일정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문화·관광·환경 분야 사회연대경제 사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기재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은 2026년에 일부 증가하였으나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중기부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임. 소셜벤처 육성 사업은 2024년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음

표 4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가율 ('26/'25)
합계			312,723	293,396	126,320	57,741	159,143	175.6%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7,364	7,500	1,580	1,580	3,130	98.1%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625	500	-	-	-	-
과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협동조합	1,293	1,272	636	509	509	0.0%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6,589	6,965	2,695	1,675	5,250	213.4%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	-	-	-	11,839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사회연대경제	3,500	3,500	-	-	-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사회연대경제	2,000	-	-	-	-	-
문체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7,000	6,968	-	-	-	-
	문화재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	-	500	-	-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연대경제	2,644	-	-	-	-	-
	관광두레 조성	사회연대경제	12,581	-	-	-	-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돌봄공동체	5,852	5,852	4,368	4,305	4,305	0.0%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돌봄공동체	1,000	900	1,386	1,848	2,772	50.0%
	농업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돌봄공동체	1,150	4,350	4,180	2,388	1,508	-36.9%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기업	650	650	-	-	-	-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사회연대경제	3,910	3,900	2,390	1,291	-	-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5,000	4,000	-	-	-	-
산업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회연대경제	19,330	21,000	9,440	-	-	-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사회연대경제	2,871	-	-	-	-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화)	사회연대경제	5,733	-	-	-	-	-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회적기업	3,190	-	-	-	-	-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회연대경제	-	-	-	-	-	-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사회연대경제	3,210	2,568	-	-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협동조합	15,754	12,600	11,540	11,540	6,825	-40.9%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협동조합	6,078	4,851	3,900	4,193	4,833	15.3%
	소셜벤처 육성	소셜벤처	2,328	2,002	-	-	-	-
기후부	사회적경제사업화지원 (환경분야사회적경제육성)	사회연대경제	1,200	1,300	680	-	-	-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일반)	사회적기업	21,738	24,621	-	-	-	-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회적기업	64,402	69,529	32,990	28,412	85,872	202.2%
	사회적기업육성(지특)	사회적기업	99,272	103,377	47,665	-	32,100	-
	사회적기업육성(제주)	사회적기업	5,133	4,937	2,370	-	-	-
성평등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지원	사회적기업	234	254	-	-	-	-
복지부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자활기업	0	0	0	0	-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회연대경제	930	-	-	-	-	-
국토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0	-	-	-	-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162	0	-	-	200	-

주1 : 본 분석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예산만을 집계한 것으로, 펀드·보증·대출 등 금융사업 및 사회연대경제가 일부 포함된 일반사업은 제외함. 이는 해당 사업을 포함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정책 규모가 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임

주2 :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일몰된 경우는 예산을 '-'로 표기하였으며, 사업은 존재하나 비예산 사업인 경우 예산을 '0'으로 표기  
 자료 :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도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각 중앙부처, 연도별)

### 3 지원대상별 사회연대경제 예산

- 지원대상별로 보면,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 변화는 모든 조직 유형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각 대상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 사업의 존속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 사회연대경제 전체 지원 사업은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사업화)」 및 행안부와 중기부 사업이 2023~2024년 이후 대부분 종료되면서 급격히 축소된 이후, 2026년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이 신규 편성되면서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 협동조합 지원 사업은 기재부 예산이 2024~2025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26년에 2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축소와 산림청 관련 사업 중단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반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지특)」이 2026년에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 예산 반등을 견인하였음
- 마을기업은 행안부 단일 사업 중심 구조 속에서 예산 축소 이후 재확대되는 변동성이 확인되며, 돌봄공동체는 농식품부 사업이 유지되며 안정적 수준을 지속함
- 소셜벤처는 중기부 사업 종료로 예산이 소멸하였고, 자활기업은 ‘중앙자산키움펀드’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예산 편성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표 5 지원대상별 중앙부처 사회연대경제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지원대상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합계	312,723	293,396	126,320	57,741	159,143	-15.5%	175.6%
사회연대경제	57,909	32,268	12,510	1,291	11,839	-32.8%	817.0%
협동조합	36,276	30,723	17,656	17,822	15,497	-19.2%	-13.0%
사회적기업	201,619	210,336	83,525	28,412	117,972	-12.5%	315.2%
마을기업	6,589	6,965	2,695	1,675	5,250	-5.5%	213.4%
자활기업	0	0	0	0	0	-	-
돌봄공동체	8,002	11,102	9,934	8,541	8,585	1.8%	0.5%
소셜벤처	2,328	2,002	0	0	0	-100.0%	-

### III.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예산 변화

#### 1 광역지자체

##### 1 전체 예산 (국비+시도비)

- 광역지자체별 사회연대경제 전체 예산은 중앙부처 예산과 유사하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3.5%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급격히 축소된 이후, 2026년에는 +30.8% 증가하며 일부 회복된 흐름을 보임
- 경기도는 유일하게 2022~2025년 기간 동안 예산이 증가한 지역으로, 2026년 기준 총 333억 원 규모를 유지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음

표 6 광역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전체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지역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서울	38,421	24,032	14,617	16,809	18,700	-24.1%	11.3%
부산	15,018	14,315	6,514	1,676	5,808	-51.9%	246.6%
대구	24,849	15,080	5,348	1,957	3,554	-57.1%	81.6%
인천	10,713	11,135	5,202	2,081	4,246	-42.1%	104.0%
광주	12,634	15,720	12,389	3,971	10,144	-32.0%	155.4%
대전	26,136	35,946	29,529	14,538	5,921	-17.8%	-59.3%
울산	8,443	8,018	2,632	408	2,755	-63.6%	575.2%
세종	4,276	4,119	2,393	753	989	-44.0%	31.4%
경기	28,170	41,550	36,566	32,484	33,338	4.9%	2.6%
강원	23,025	26,727	8,625	780	2,709	-67.6%	247.4%
충북	8,023	9,419	2,791	678	4,365	-56.1%	543.9%
충남	19,129	26,821	22,091	4,358	6,044	-38.9%	38.7%
전북	36,259	20,405	11,178	4,906	6,479	-48.7%	32.1%
전남	13,774	14,693	8,955	3,378	5,153	-37.4%	52.6%
경북	25,130	22,827	9,596	3,414	7,991	-48.6%	134.1%
경남	32,909	9,321	5,976	2,676	4,654	-56.7%	73.9%
제주	10,279	10,417	7,670	4,109	6,620	-26.3%	61.1%
합계	337,189	310,545	192,074	98,975	129,471	-33.5%	30.8%
평균	19,835	18,267	11,298	5,822	7,616		

자료 : '지방재정365'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예산 추출하여 저자가 재정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농촌돌봄농장 포함), 소셜벤처'

## 2 국비 매칭 예산

- 광역지자체 국비 매칭 예산은 2022년 1,813억 원에서 2025년 23.8억 원까지 급격히 축소되며 사실상 국비 기반 사업이 붕괴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76.4%의 매우 가파른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5년 국비 매칭 예산 규모는 전국 합계 기준 23.8억 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국비 연계 사업이 중단되거나 최소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해석됨
- 2026년에는 461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1,83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25년 극단적으로 낮은 기저에 따른 반등 효과로, 여전히 2022~2023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표 7 광역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국비 매칭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지역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서울	11,051	10,011	2,464	115	5,336	-78.2%	4,540.0%
부산	9,145	9,343	4,081	128	3,127	-75.9%	2,352.5%
대구	13,674	8,513	2,294	88	1,188	-81.4%	1,257.7%
인천	7,003	7,292	2,585	30	1,885	-83.8%	6,183.3%
광주	7,493	9,758	6,477	130	6,813	-74.1%	5,140.8%
대전	10,756	16,661	9,023	25	425	-86.8%	1,600.0%
울산	5,695	5,551	1,654	45	1,682	-80.1%	3,637.8%
세종	1,890	1,975	835	50	230	-70.2%	360.0%
경기	15,446	15,898	4,287	55	6,720	-84.7%	12,118.2%
강원	13,965	15,569	4,605	120	1,840	-79.5%	1,433.0%
충북	6,454	7,059	1,669	92	3,142	-75.8%	3,317.3%
충남	7,865	12,432	7,747	125	1,500	-74.9%	1,100.0%
전북	20,752	12,637	3,929	225	1,830	-77.9%	713.3%
전남	10,010	10,684	5,486	160	1,955	-74.8%	1,121.9%
경북	17,175	15,895	5,599	590	4,495	-67.5%	662.4%
경남	17,073	6,460	3,474	105	1,805	-81.7%	1,619.0%
제주	5,847	5,580	2,757	299	2,176	-62.9%	627.8%
합계	181,294	171,319	68,965	2,380	46,148	-76.4%	1,838.6%
평균	10,664	10,078	4,057	140	2,715		

자료 : '지방재정365'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예산 추출하여 저자가 재정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농촌돌봄농장 포함), 소셜벤처'

### 3 자체 예산 \*국비 매칭이 없는 광역지자체 자체 예산

-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자체 예산은 광역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 의지와 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중앙정부 예산 축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
- 중앙부처 및 국비 매칭 예산이 급격히 감소한 2022~2025년 기간 동안, 자체 예산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축소된 국비의 영향을 보완하기 위한 재정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됨
- 특히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예산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정책 대응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인천, 대전 등 일부 보수 성향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남

표 8 광역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자체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지역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서울	23,361	11,416	11,546	16,636	12,041	-10.7%	-27.6%
부산	3,136	2,319	1,305	1,435	1,510	-22.9%	5.2%
대구	5,217	2,543	2,054	1,768	1,820	-30.3%	2.9%
인천	1,900	1,966	1,982	2,036	1,832	2.3%	-10.0%
광주	2,594	2,512	5,051	3,750	0	13.1%	-
대전	5,075	1,990	3,943	14,484	5,139	41.8%	-64.5%
울산	678	436	388	317	324	-22.4%	2.4%
세종	1,435	1,242	1,221	653	649	-23.1%	-0.5%
경기	12,582	25,511	32,279	32,429	25,120	37.1%	-22.5%
강원	3,011	2,580	1,843	613	525	-41.2%	-14.4%
충북	942	632	567	458	470	-21.4%	2.6%
충남	4,403	3,410	3,510	4,195	3,956	-1.6%	-5.7%
전북	4,416	4,003	6,782	4,614	4,421	1.5%	-4.2%
전남	1,657	1,453	2,936	3,057	2,903	22.6%	-5.0%
경북	4,772	4,487	3,346	2,722	2,526	-17.1%	-7.2%
경남	5,213	1,342	1,554	2,539	2,414	-21.3%	-4.9%
제주	551	495	1,966	3,579	2,607	86.6%	-27.2%
합계	80,942	68,335	82,271	95,285	68,256	5.6%	-28.4%
평균	4,761	4,020	4,839	5,605	4,015		

주 : 자체 예산은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광역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편성한 예산을 의미

자료 : '지방재정365'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예산 추출하여 저자가 재정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농촌돌봄농장 포함), 소셜벤처'

## 4 사업별 예산

- 광역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예산 축소는 총액 감소에 그치지 않고 주요 사업 기능의 약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건비·일자리·사회보험료, 사업개발·지역특화, 센터·허브·거점·타운, 청년, 협업·연계 분야의 축소가 두드러짐
- 인건비·일자리·사회보험료 예산은 2022년 1,204억 원에서 2025년 51억 원으로 급감한 뒤 2026년 343억 원으로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2년의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함. 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 사업개발·지역특화 예산은 2026년 2.8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어 사실상 소멸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상품·서비스 개발과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발굴 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됨
- 센터·허브·거점·타운 예산도 2022년 967억 원에서 2026년 138억 원으로 감소하여, 교육·상담·판로·금융·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간지원 기반의 위축이 우려됨. 청년 및 협업·연계 예산 역시 대부분 축소되거나 사라져 신규 인재 유입과 조직 간 협력 기반도 약화된 상태임

표 9 광역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사업별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사업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인건비/일자리/사회보험료	120,382	121,267	55,900	5,127	34,286	-54.6%	568.7%
사업개발/지역특화	22,713	22,030	241	300	284	-66.1%	-5.2%
육성/지정/고도화/공급기반 조성	90,968	101,328	49,560	15,904	34,094	-35.3%	114.4%
센터/허브/거점/타운	96,718	70,930	55,700	17,717	13,811	-34.6%	-22.0%
청년	18,153	11,105	1,349	387	0	-61.8%	-
협업/연계	3,305	2,194	0	0	0	-100.0%	-
창업/설립	1,611	1,288	347	335	249	-32.5%	-25.6%
행사/마켓/장터/한마당	375	520	400	0	0	-100.0%	-
네트워크	61	61	55	59	27	-0.9%	-53.8%
공간/장비	0	21	0	0	0	-	-
기금/투융자/편당	15,765	7,215	8,107	18,077	10,501	3.5%	-41.9%

주 :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을 키워드 분류한 결과임. 다만 사업명만으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하나의 사업이 복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분류하였음. 따라서 사업유형별 예산 합계는 전체 예산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지방재정365'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예산 추출하여 저자가 재정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농촌돌봄농장 포함), 소셜벤처'

## 5 |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예산

- 광역지자체장의 소속 정당별 사회연대경제 평균 예산을 비교한 결과, 전체 예산은 보수와 진보 지역 모두에서 감소 흐름을 보였음. 이는 사회연대경제 예산 축소가 개별 지자체의 선택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 축소와 국비 매칭 사업 축소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결과임을 보여줌
- 다만 감소 폭과 예산 규모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확인됨. 2022~2025년 전체 예산의 연평균 감소율은 보수 지자체가 -40.3%, 진보 지자체가 -21.5%로 나타나, 보수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감소가 확인됨
  - 또한 절대적인 평균 예산 규모 역시 진보 지자체가 보수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이는 자체 예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자체 예산은 지자체의 독자적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2022~2025년 사이 보수 지자체의 자체 예산은 연평균 -6.8% 감소한 반면, 진보 지자체의 자체 예산은 연평균 +29.6% 증가하였음
- 이는 중앙정부 예산 축소 국면에서 일부 진보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려는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함

표 10 광역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사회연대경제 평균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구분	개수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전체	보수	12	19,673	17,313	9,610	4,177	5,645	-40.3%	35.1%
	진보	5	20,223	20,557	15,352	9,770	12,347	-21.5%	26.4%
자체	보수	12	4,929	2,863	2,771	3,988	2,767	-6.8%	-30.6%
	진보	5	4,360	6,795	9,803	9,486	7,010	29.6%	-26.1%

주 : 광역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은 2026년 기준임

자료 : '지방재정365'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예산 추출하여 저자가 재정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농촌돌봄농장 포함), 소셜벤처'

## 2 기초지자체

### 1 총괄

- 기초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2022년 3,147억 원에서 2025년 943억 원으로 급감한 이후 2026년에도 929억 원 수준에 머물며 회복 없이 축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평균 예산 또한 1,393백만 원에서 411백만 원으로 감소하여, 개별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업 규모 역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재원별로는 국비가 2025년 평균 14백만 원 수준까지 급락하며 사실상 사업 기반이 붕괴된 이후 2026년 일부 반등(평균 94백만 원)을 보였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 대비 매우 낮은 상태임
- 시도비와 시군구비는 각각 -28.1%, -19.6%의 감소율을 보이며 전반적인 축소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구비 평균이 649백만 원에서 274백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초 지자체 자체 사업 수행 여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체 예산 역시 연평균 -15.8% 감소하며 광역 단계와 달리 국비 축소를 보완하지 못하고 동반 축소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 재정 축소가 기초 지자체로 직접 전이되는 구조가 확인됨

표 11 기초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전체	합계	314,717	303,733	157,987	94,304	92,902	-33.1%	-1.5%
	평균	1,393	1,344	699	417	411		
국비	합계	133,009	133,866	46,897	3,142	21,237	-71.3%	575.9%
	평균	589	592	208	14	94		
시도비	합계	34,841	33,664	20,920	12,958	8,023	-28.1%	-38.1%
	평균	154	149	93	57	35		
시군구비	합계	146,590	135,952	90,169	76,204	61,955	-19.6%	-18.7%
	평균	649	602	399	337	274		
자체	합계	97,931	96,378	61,573	58,524	47,478	-15.8%	-18.9%
	평균	433	426	272	259	210		

주 : 기초 지자체 예산에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는 세종과 제주의 예산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지방재정365'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예산 추출하여 저자가 재정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농촌돌봄농장 포함), 소셜벤처'

## 2 사업별 예산

- 기초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예산 축소는 인건비·일자리, 사업개발, 청년, 협업·연계 등 현장 밀착형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고용 유지, 사업모델 개발, 신규 인재 유입, 조직 간 협력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었음을 보여줌
- 인건비·일자리·사회보험료 예산은 2022년 1,211억 원에서 2025년 103억 원으로 급감한 뒤, 2026년 251억 원으로 일부 회복되었음. 그러나 2026년 예산도 2022년의 약 20.7% 수준에 불과하여,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기능은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태임
- 사업개발·지역특화 예산은 2022년 222억 원에서 2026년 12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청년 예산과 협업·연계 예산도 대부분 축소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발굴, 청년 인재 유입, 조직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 육성·지정·고도화·공급기반 조성 예산과 센터·허브·거점·타운 예산도 감소 흐름을 보임. 기초지자체는 실제 기업 발굴, 상담, 교육, 판로,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지는 현장 단위라는 점에서, 육성 및 중간지원 예산 축소는 지역 생태계의 실행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12 기초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사업별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사업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인건비/일자리 /사회보험료	121,067	125,538	58,219	10,314	25,094	-46.0%	143.3%
사업개발 /지역특화	22,195	22,121	1,209	1,825	1,222	-46.5%	-33.0%
육성/지정/고도화 /공급기반 조성	86,215	82,189	41,060	18,692	19,676	-31.8%	5.3%
센터/허브 /거점/타운	22,881	18,937	20,221	14,656	13,869	-10.5%	-5.4%
청년	23,593	13,740	3,562	989	192	-54.8%	-80.6%
협업/연계	2,816	3,186	23	10	10	-75.3%	-5.7%
창업/설립	1,921	2,158	9,053	5,818	4,764	31.9%	-18.1%
행사/마켓 /장터/한마당	647	602	721	474	585	-7.5%	23.4%
네트워크	105	21	44	55	45	-15.1%	-17.0%
공간/장비	427	163	19	19	60	-53.9%	212.5%
기금/투융자 /편당	135	163	60	59	105	-18.7%	77.2%

주 :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을 키워드 분류한 결과임. 다만 사업명만으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하나의 사업이 복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분류하였음. 따라서 사업유형별 예산 합계는 전체 예산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지방재정365'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예산 추출하여 저자가 재정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농촌돌봄농장 포함), 소셜벤처'

### 3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예산

- 기초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별 사회연대경제 평균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 축소의 영향이 동일하게 작용하며 보수·진보 모두 감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감소 속도에서는 보수(-47.4%)가 진보(-23.3%)보다 더 가파른 축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국비(평균)는 양측 모두에서 -70% 내외의 급감이 나타나며 기초 지자체 예산 축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2026년 반등 역시 기저효과에 따른 제한적 회복에 그치는 특징을 보임
- 한편 시도비와 시군구비는 국비 매칭 여부가 혼재된 재원인 반면, 자체 예산(평균)은 국비·시도비 매칭 없이 기초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편성한 재원으로 정책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 그러나 자체 예산의 경우 광역 지자체와 달리 진보 지자체에서도 2022~2025년 기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 지자체에서는 재정 자립도의 한계로 인해 자체 재원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확인됨
- 다만 진보 지자체는 절대적인 평균 예산 규모 측면에서 보수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동일한 감소 흐름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정책 대응 여력은 유지된 것으로 해석됨

표 13 기초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사회연대경제 평균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구분	개수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전체	보수	151	1,035	934	406	151	215	-47.4%	42.2%
	진보	75	2,113	2,169	1,290	953	806	-23.3%	-15.4%
국비	보수	151	569	562	192	11	87	-73.0%	676.4%
	진보	75	627	654	238	19	107	-68.7%	457.9%
시도비	보수	151	153	143	69	30	26	-42.1%	-13.0%
	진보	75	156	162	140	113	55	-10.2%	-51.5%
시군구비	보수	151	312	230	144	110	102	-29.4%	-7.7%
	진보	75	1,327	1,351	912	795	622	-15.7%	-21.8%
자체	보수	151	115	77	66	68	69	-16.1%	1.6%
	진보	75	1,074	1,130	689	643	494	-15.7%	-23.2%

주1 : 기초 지자체 예산에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는 세종과 제주의 예산은 제외된 수치임

주2 : 자체 예산은 국비와 시도비가 매칭되지 않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편성한 예산을 의미

자료 : '지방재정365'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예산 추출하여 저자가 재정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농촌돌봄농장 포함), 소셜벤처'

### 3 요약

#### □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2022년 이후 중앙·광역·기초 모두에서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2026년 회복 양상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중앙부처 예산은 2025년 577억 원까지 감소한 뒤 2026년 1,591억 원으로 일부 회복되었고, 광역지자체 예산도 2025년 990억 원에서 2026년 1,295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기초지자체 예산은 2025년 943억 원에서 2026년 929억 원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여, 중앙과 광역의 예산 회복이 기초 단위까지 충분히 전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전체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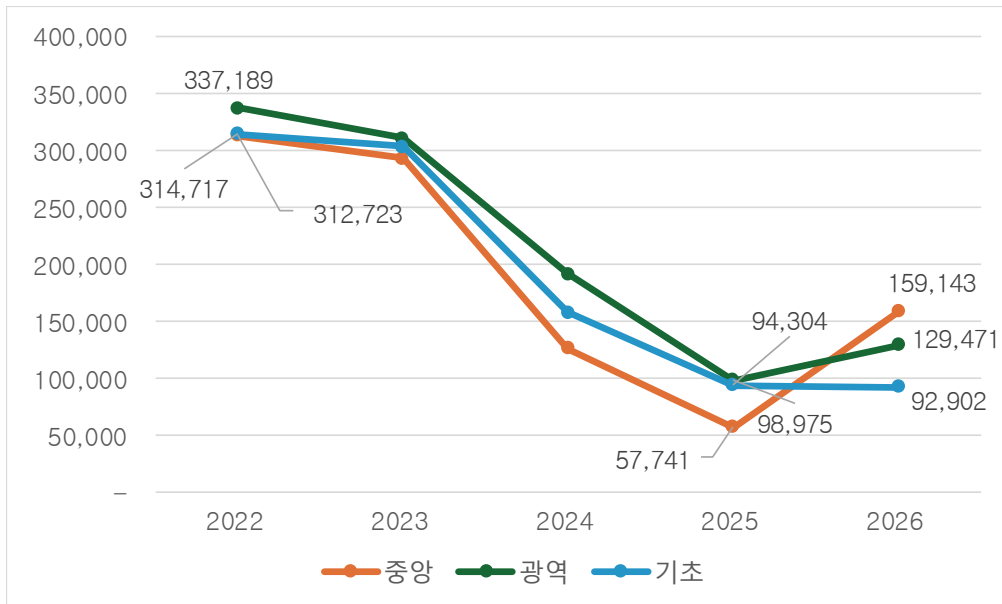


표 14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전체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중앙	312,723	293,396	126,320	57,741	159,143	-43.1%	175.6%
광역	337,189	310,545	192,074	98,975	129,471	-33.5%	30.8%
기초	314,717	303,733	157,987	94,304	92,902	-33.1%	-1.5%

#### □ 사업유형별 예산

- 사업유형별로는 인건비, 사업개발, 지원기관 예산의 축소가 두드러짐. 특히 사업개발 예산은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2022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

의 상품·서비스 개발,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발굴, 지역특화 사업 추진 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됨

- 인건비 예산도 2026년에 일부 회복되었으나 2022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임
- 지원기관 예산은 광역과 기초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광역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남. 이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광역 단위 조정·연계 기능과 교육, 상담, 판로, 네트워크 지원 기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 기초 단위에서도 지원기관 예산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지만, 전체 예산 축소와 사업개발 예산 감소가 함께 나타나면서 현장 실행 기반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임

표 15 광역·기초 지자체 주요 사업유형별 사회연대경제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광역	인건비	120,382	121,267	55,900	5,127	34,286	-54.6%	568.7%
	사업개발	22,713	22,030	241	300	284	-66.1%	-5.2%
	지원기관	96,718	70,930	55,700	17,717	13,811	-34.6%	-22.0%
기초	인건비	121,067	125,538	58,219	10,314	25,094	-46.0%	143.3%
	사업개발	22,195	22,121	1,209	1,825	1,222	-46.5%	-33.0%
	지원기관	22,881	18,937	20,221	14,656	13,869	-10.5%	-5.4%

## □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자체 예산

-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자체 예산을 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2022~2025년 보수 지자체의 자체 평균 예산은 연평균 -6.8% 감소한 반면, 진보 지자체는 +29.6% 증가하여 중앙정부 예산 축소 국면에서 자체 재원을 통한 대응 차이가 확인됨
- 그러나 기초지자체에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자체 평균 예산이 약 -16% 수준으로 감소하여,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자체 재정만으로 중앙정부 예산 축소를 보완하기 어려운 구조가 확인됨

표 16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사회연대경제 자체 평균 예산(2022~2026)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25/'22	'26/'25	
광역	보수	4,929	2,863	2,771	3,988	2,767	-6.8%	-30.6%
	진보	4,360	6,795	9,803	9,486	7,010	29.6%	-26.1%
기초	보수	115	77	66	68	69	-16.1%	1.6%
	진보	1,074	1,130	689	643	494	-15.7%	-23.2%

## IV.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요 추정

### 1 제9회 지방선거 사회연대경제 9대 정책 요구과제

- 제9회 지방선거 사회연대경제 공동공약은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사회서비스, 생활서비스, 주거, 지역순환경제, 디지털, 사회적금융, 인재양성·교육·연구, 생태계 및 지원체계 혁신 등 9대 정책 요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과제들은 시민과 지역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과제와,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금융·인재·중간지원 기반 조성 과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사회서비스, 생활서비스, 주거, 디지털 분야는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금융 분야는 지역 내 자원과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재투자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인재양성·교육·연구와 생태계 및 지원체계 혁신 분야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실행체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인력,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임
- 따라서 9대 정책 요구과제는 개별 사업의 단순한 목록이라기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순환,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자산 형성, 정책 실행기반 강화를 포괄하는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패키지로 이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9대 정책 요구과제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 사업량과 단가를 설정하고,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4년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총사업비를 추정함

표 17 제9회 지방선거 사회연대경제 9대 정책 요구과제

분야	제안 방향	세부 과제
1 에너지 전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에너지 생산·운영·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주민 참여형 ‘햇빛연금’ 마을 발전소 조성 2) ‘태양광 닥터(O&M)’ 5,000명 양성 및 관리 위탁 3)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사회적기업 전담제 4) 산업단지 RE100 대응 ‘사회연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5) 시민 주도형 ‘에너지 마중물 펀드’ 조성
2 통합 돌봄 · 사회 서비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실행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주민·사회연대경제 참여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2) 읍면동 ‘리빙케어 스테이션’ 100% 구축 및 위탁 운영 3)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지역 주치의제 전면 도입 4) 사회연대경제 기반 ‘케어안심주택(공유형 사회주택)’ 확대 5) 지역 순환형 ‘돌봄-로컬푸드 타임뱅크’ 도입 6)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연대 공제회’ 설립
3 생활 서비스	먹거리, 교통 등 지역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생활서비스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공급하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 거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행복 신고 달리는 이동식 푸드마켓’ 운영 2) 주민 주도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3) 1인 가구 ‘우리동네 맥가이버(생활 매니저)’ 위탁 4) ‘프레스턴 모델’ 기반 ‘Local Buy’ 지역순환경제 의무화 5) 사회연대경제 ‘통합 생활서비스권’ 발행 및 전용 거점 구축

분야	제안 방향	세부 과제
4 주거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주민의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li> <li>2) 빈집 공동체 자산화</li> <li>3)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li> </ol>
5 지역 순환 경제	지역 내 자원과 소득이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 '지역순환경제 추진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li> <li>2) 지역순환적 공공조달 제도화 및 사회연대경제 연계</li> <li>3)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공플랫폼' 협동조합 추진</li> <li>4) 소상공인·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위한 '대안적 지역금융모델' 구축</li> <li>5) 지역 앵커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li> <li>6) 부어 '굿뜨래페이' 모델의 확대, 지역화폐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내 완전 순환체계 구축</li> <li>7) 사회연대경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협매장 지역화폐 이용안정성 확보</li> <li>8) 돌봄-먹거리-지역순환경제의 연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확장 및 생애주기별 보편적인 먹거리 돌봄정책 실현</li> <li>9) 사회연대경제 판로지원 확대: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공급망 연계 강화</li> </ol>
6 디지털	지역주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책 실행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li> <li>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li> <li>3) 마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li> </ol>
7 사회적 금융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금융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지역 자산화와 지속가능한 투자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연대경제 기금 및 금융중개기관 확대</li> <li>2) 지역상생금고(지방공금고) 기반 사회연대경제 금융상품 개발</li> <li>3) 현장기반 자조금융 및 사회연대 투자펀드 조성</li> <li>4) 상호금융 연계 지역혁신 대출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li> <li>5) 주민참여형 지역프로젝트 채권 발행</li> <li>6) 지역자산 유동화 펀드 조성 및 유휴자산 활용 활성화</li> <li>7)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기반 성과형 사업 확대</li> <li>8) 지역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인공제 기반 사회적금융 확대</li> </ol>
8 인재 양성 · 교육 연구	지역에 사람이 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인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전 생애 교육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 생애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초·중·고-시민까지)</li> <li>2) 지역 기반 인재양성 및 지역교육인증제 도입</li> <li>3) 협동형 창업을 주도하는 지역 인재 양성</li> <li>4) 전략 분야별 특화 전문가 양성</li> <li>5) 중간지원조직 혁신 및 아키텍처 인재 육성</li> <li>6) 지역 기반 활동인재 노동 안정 및 공제체계 구축</li> </ol>
9 생태계 및 지원 체계 혁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반과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과 지역 기반 실행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정비 및 지역순환경제 전략 수립</li> <li>2)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li> <li>3)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사회연대경제위원회 활성화)</li> <li>4) 혁신형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li> <li>5) 사회적가치 측정 및 지역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구축</li> </ol>

## 2 세부 예산 추정

### 1 에너지 전환 :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 에너지 전환 분야의 5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1조 1,460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주민 참여형 ‘햇빛연금’ 마을 발전소 조성 5,000억 원, ‘태양광 닥터(O&M)’ 5,000명 양성 및 관리 위탁 1,000억 원,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사회적기업 전담제 2,260억 원, 산업단지 RE100 대응 ‘사회연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200억 원, 시민 주도형 ‘에너지 마중물 펀드’ 조성 2,000억 원으로 추정됨

표 18 에너지 전환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주민 참여형 ‘햇빛연금’ 마을 발전소 조성	500개 마을	개소당 10억 원	500개 × 10억 원	5,000억 원
2	‘태양광 닥터(O&M)’ 5,000명 양성 및 관리 위탁	5,000명	1인당 2,000만 원	5,000명 × 0.2억 원	1,000억 원
3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사회적기업 전담제	기초당 100가구, 총 22,600가구	가구당 1,000만 원	226개 × 100가구 × 0.1억 원	2,260억 원
4	산업단지 RE100 대응 ‘사회연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60개 선도 기초지자체	개소당 20억 원	60개 × 20억 원	1,200억 원
5	시민 주도형 ‘에너지 마중물 펀드’ 조성	226개 기초 + 권역 운영기금	기초당 평균 5억 원 + 권역기금	1,130억 원 + 870억 원	2,000억 원
합계					1조 1,460억 원

### 2 통합돌봄·사회서비스 : 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 통합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6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1조 890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주민·사회연대경제 참여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45억 원, 읍면동 ‘리빙케어 스테이션’ 구축 및 위탁 운영 6,780억 원,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지역 주치의제 도입 1,130억 원, 사회연대경제 기반 ‘케어안심주택’ 확대 2,260억 원, 지역 순환형 ‘돌봄-로컬푸드 타임뱅크’ 도입 226억 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연대 공제회’ 설립 452억 원으로 추정됨

표 19 통합돌봄·사회서비스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주민·사회연대경제 참여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000만 원	226개 × 0.2억 원	45억 원
2	읍면동 ‘리빙케어 스테이션’ 100% 구축 및 위탁 운영	기초당 대표 거점 1개소, 총 226개소	개소당 30억 원	226개 × 30억 원	6,780억 원
3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 연계 지역 주치의제 전면 도입	기초당 통합돌봄 컨소시엄 1개소, 총 226개소	개소당 5억 원	226개 × 5억 원	1,130억 원
4	사회연대경제 기반 ‘케어 안심주택(공유형 사회주택)’ 확대	기초당 1개 선도모델, 총 226개소	개소당 10억 원	226개 × 10억 원	2,260억 원
5	지역 순환형 ‘돌봄-로컬푸드 타임뱅크’ 도입	기초당 1식, 총 226개	기초당 1억 원	226개 × 1억 원	226억 원
6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연대 공제회’ 설립	기초당 공제기금 출연 1식, 총 226개	기초당 2억 원	226개 × 2억 원	452억 원
합계					약 1조 890억 원

### 3 생활서비스 : 주민 중심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지역 인프라 강화

- 생활서비스 분야의 5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7,006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행복 신고 달리는 이동식 푸드마켓’ 운영 1,130억 원, 주민 주도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1,808억 원, 1인 가구 ‘우리동네 맥가이버(생활 매니저)’ 위탁 1,356억 원, ‘프레스턴 모델’ 기반 ‘Local Buy’ 지역순환경제 의무화 452억 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생활서비스권’ 발행 및 전용 거점 구축 2,260억 원으로 추정됨

표 20 생활서비스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행복 신고 달리는 이동식 푸드마켓’ 운영	기초당 1대, 총 226대	차량 1대당 5억 원	226대 × 5억 원	1,130억 원
2	주민 주도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기초당 2대, 총 452대	차량 1대당 4억 원	226개 × 2대 × 4억 원	1,808억 원
3	1인 가구 ‘우리동네 맥가이버(생활 매니저)’ 위탁	기초당 1개 수행조직, 총 226개	기초당 6억 원	226개 × 6억 원	1,356억 원
4	‘프레스턴 모델’ 기반 ‘Local Buy’ 지역순환경제 의무화	기초당 1식, 총 226개	기초당 2억 원	226개 × 2억 원	452억 원
5	사회연대경제 ‘통합 생활서비스권’ 발행 및 전용 거점 구축	기초당 1개 거점, 총 226개소	개소당 10억 원	226개 × 10억 원	2,260억 원
합계					7,006억 원

#### 4 주거 :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주거 분야의 3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3조 3,650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2조 8,000억 원, 빈집 공동체 자산화 3,390억 원,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2,260억 원으로 추정됨

표 21 주거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지역주민의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총 4만 호	호당 7,000만 원	40,000호 × 0.7억 원	2조 8,000억 원
2	빈집 공동체 자산화	기초당 10채, 총 2,260채	채당 1.5억 원	226개 × 10채 × 1.5억 원	3,390억 원
3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기초당 5개 구역, 총 1,130개 구역	구역당 2억 원	226개 × 5개 구역 × 2억 원	2,260억 원
합계					3조 3,650억 원

#### 5 지역순환경제 : 지역 내 자원과 소득을 순환시키는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순환경제 분야의 9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1조 5,483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지역순환경제 추진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45억 원, 지역순환적 공공조달 제도화 및 사회연대경제 연계 452억 원, ‘공공플랫폼’ 협동조합 추진 2,260억 원, ‘대안적 지역금융모델’ 구축 4,520억 원, 지역 앵커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1,130억 원, ‘굿뜨래페이’ 모델 확대 및 지역화폐 시스템 고도화 4,520억 원, 생협매장 지역화폐 이용안정성 확보 226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확장 및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정책 실현 1,200억 원, 사회연대경제 판로지원 확대 1,130억 원으로 추정됨

표 22 지역순환경제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 ‘지역순환경제 추진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000만 원	226개 × 0.2억 원	45억 원
2	지역순환적 공공조달 제도화 및 사회연대경제 연계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억 원	226개 × 2억 원	452억 원
3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공플랫폼’ 협동조합 추진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10억 원	226개 × 10억 원	2,260억 원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4	소상공인·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위한 '대안적 지역금융모델' 구축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0억 원	226개 × 20억 원	4,520억 원
5	지역 앵커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5억 원	226개 × 5억 원	1,130억 원
6	부여 '굿드래페이' 모델의 확대, 지역화폐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내 완전 순환체계 구축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0억 원	226개 × 20억 원	4,520억 원
7	사회연대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협매장 지역화폐 이용안정성 확보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1억 원	226개 × 1억 원	226억 원
8	돌봄-먹거리-지역순환경제의 연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확장 및 생애주기별 보편적인 먹거리 돌봄정책 실현	임산부 꾸러미 연 5만 명 +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기초당 1식	임산부 1인당 48만 원 + 기초당 연 0.25억 원	5만 명 × 48만 원 × 4년 + 226개 × 0.25억 원 × 4년	약 1,200억 원
9	사회연대경제 판로지원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공급망 연계 강화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5억 원	226개 × 5억 원	1,130억 원
합계					1조 5,483억 원

## 6 디지털 : 디지털 격차 해소와 주민 참여형 지역 디지털 전환 추진

- 디지털 분야의 3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2,870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1,130억 원,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1,130억 원, 마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610억 원으로 추정됨

표 23 디지털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주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기초당 5개 마을 디지털 배움터, 총 1,130개소	개소당 1억 원	226개 × 5개소 × 1억 원	1,130억 원
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기초당 1개 플랫폼, 총 226개	기초당 5억 원	226개 × 5억 원	1,130억 원
3	마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초당 5개 마을 기록화 + 조례·기본체계 1식	마을당 5,000만 원 + 기초당 2,000만 원	226개 × {5개 × 0.5억 원 + 0.2억 원}	610억 원
합계					2,870억 원

## 7 사회적금융 : 지역 기반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금융 분야의 8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2조 7,120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 기금 및 금융중개기관 확대 5,650억 원, 지역상생금고 기반 사회연대경제 금융상품 개발 2,260억 원, 현장기반 자조금융 및 사회연대 투자펀드 조성 4,520억 원, 상호금융 연계 지역혁신 대출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4,520억 원, 주민참여형 지역프로젝트 채권 발행 2,260억 원, 지역자산 유동화 펀드 조성 및 유류자산 활용 활성화 4,520억 원, 사회성과연계채권 기반 성과형 사업 확대 2,260억 원, 지역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인공제 기반 사회적금융 확대 1,130억 원으로 추정됨

표 24 사회적금융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사회연대경제 기금 및 금융중개기관 확대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5억 원	226개 × 25억 원	5,650억 원
2	지역상생금고 기반 사회연대경제 금융상품 개발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10억 원	226개 × 10억 원	2,260억 원
3	현장기반 자조금융 및 사회연대 투자펀드 조성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0억 원	226개 × 20억 원	4,520억 원
4	상호금융 연계 지역혁신 대출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0억 원	226개 × 20억 원	4,520억 원
5	주민참여형 지역프로젝트 채권 발행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10억 원	226개 × 10억 원	2,260억 원
6	지역자산 유동화 펀드 조성 및 유류자산 활용 활성화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0억 원	226개 × 20억 원	4,520억 원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기반 성과형 사업 확대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10억 원	226개 × 10억 원	2,260억 원
8	지역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인공제 기반 사회적금융 확대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5억 원	226개 × 5억 원	1,130억 원
합계					2조 7,120억 원

## 8 인재양성·교육·연구 : 지역에 사람이 머무는 사회연대경제 인재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 인재양성·교육·연구 분야의 6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5,424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전 생애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678억 원, 지역 기반 인재양성 및 지역교육인증제 도입 678억 원, 협동형 창업을 주도하는 지역 인재 양성 1,356억 원, 전략 분야별 특화 전문가 양성 904억 원, 중간지원조직 혁신 및 아키텍처 인재육성 1,356억 원, 지역 기반 활동인재 노동 안정 및 공제체계 구축 452억 원으로 추정됨

표 25 인재양성·교육·연구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전 생애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초·중·고-시민까지)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3억 원	226개 × 3억 원	678억 원
2	지역 기반 인재양성 및 지역교육인증제 도입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3억 원	226개 × 3억 원	678억 원
3	협동형 창업을 주도하는 지역 인재 양성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6억 원	226개 × 6억 원	1,356억 원
4	전략 분야별 특화 전문가 양성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4억 원	226개 × 4억 원	904억 원
5	중간지원조직 혁신 및 아키텍처 인재 육성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6억 원	226개 × 6억 원	1,356억 원
6	지역 기반 활동인재 노동 안정 및 공제체계 구축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억 원	226개 × 2억 원	452억 원
합계					5,424억 원

**9 생태계 및 지원체계 혁신 : 민관 협력 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및 지원체계 혁신**

- 생태계 및 지원체계 혁신 분야의 5개 과제에 대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4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약 3,616억 원으로 산정됨
- 세부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정비 및 지역순환경제 전략 수립 452억 원,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226억 원,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226억 원, 혁신형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 2,260억 원, 사회적가치 측정 및 지역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구축 452억 원으로 추정됨

표 26 생태계 및 지원체계 혁신 분야 예산 추정

구분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사업량 가정	단가 가정	산식	4년 추정예산
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정비 및 지역순환경제 전략 수립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억 원	226개 × 2억 원	452억 원
2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1억 원	226개 × 1억 원	226억 원
3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사회연대경제위원회 활성화)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1억 원	226개 × 1억 원	226억 원
4	혁신형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10억 원	226개 × 10억 원	2,260억 원
5	사회적가치 측정 및 지역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구축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당 2억 원	226개 × 2억 원	452억 원
합계					3,616억 원

### 3 예산 종합 요약

- 9대 정책 요구과제를 기준으로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4년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전체 예산 수요는 약 11조 7,519억 원으로 산정됨. 이를 기초지자체 평균으로 환산하면 지자체당 4년간 약 520억 원, 연평균 약 130억 원 수준임

표 27 지자체 필요 예산 요약

단위 : 억 원

구분	과제	총 추정 예산 (4년)	지자체별 평균 예산 (1년)
1	에너지 전환	11,460	12.7
2	통합돌봄·사회서비스	10,890	12.0
3	생활서비스	7,006	7.8
4	주거	33,650	37.2
5	지역순환경제	15,483	17.1
6	디지털	2,870	3.2
7	사회적금융	27,120	30.0
8	인재양성 교육연구	5,424	6.0
9	생태계 및 지원체계 혁신	3,616	4.0
합계		117,519	130.0

- 이는 2022년 기초지자체 사회연대경제 평균 예산이 약 13.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산술적으로 약 10배에 가까운 규모임. 따라서 현재의 기초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예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보면, 9대 정책 요구과제를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본 추정액은 각 지자체가 매년 직접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9대 정책 요구과제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과제를 선택·조합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에 가까움. 따라서 실제 개별 지자체의 예산 수요는 지역의 인구 규모, 고령화 수준, 사회서비스 수요, 주거 여건,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반, 기존 정책사업 보유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추정액에는 주거, 사회적금융, 지역자산화, 펀드, 공제, 채권, 상호금융 연계 사업 등 금융성·투자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음. 이들 사업은 전액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직접 보조사업비로 충당해야 하는 성격이 아니며, 공공재정, 민간투자, 사회적금융, 상호금융, 주민출자, 기금, 융자 등을 결합하여 조성·운용할 수 있음.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와 실제 재정 부담액은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반드시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존 정책 재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식도 가능함.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 위탁, 통합돌봄, 농촌 공간계획, 기초생활거점조성, 도시재생, 지역소멸 대응, 공공조달, 지역화폐, 생활

서비스 공급 사업 등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수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평가 기준을 정비한다면, 별도의 신규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과 기본사회기본법 발의 등 기본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돌봄, 주거, 먹거리, 이동, 에너지, 생활서비스 등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역 기반의 실행 주체를 필요로 함. 사회연대경제는 이러한 사업을 주민 참여와 지역순환 구조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기본사회 관련 사업, 지역재생 사업,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과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할 경우, 신규 재정 소요를 줄이면서도 지역 단위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
- 결국 본 예산 추정은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할 추가 재정 규모라기보다,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해 지역의 에너지 전환, 돌봄, 생활서비스, 주거,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금융, 인재양성, 정책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4년간의 총 투자·운용 규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지자체 직접사업비, 중앙정부 매칭사업비, 기존 공공서비스 전환 예산, 금융성 운용재원, 민간·주민참여 재원을 구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V. 부록 : 기초지자체별 사회연대경제 예산

광역	기초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감액 ('25-'22)	증감액 ('26-'25)
강원	강릉시	1,276	1,756	558	167	398	-1,110	231
	고성군	12	14	0	0	0	-12	0
	동해시	164	85	52	0	0	-164	0
	삼척시	269	444	173	89	72	-180	-18
	속초시	163	105	14	0	96	-163	96
	양구군	32	75	9	20	0	-12	-20
	양양군	3	66	52	0	0	-3	0
	영월군	966	1,043	436	214	452	-751	237
	원주시	4,021	4,042	2,067	433	749	-3,588	315
	인제군	1,681	1,809	966	534	771	-1,146	237
	정선군	548	663	356	141	25	-407	-116
	철원군	105	219	10	15	270	-90	255
	춘천시	2,661	2,356	1,380	608	982	-2,053	374
	태백시	243	208	90	18	108	-225	90
	평창군	754	461	150	10	10	-744	0
	홍천군	267	641	350	60	157	-207	97
	화천군	311	270	49	0	0	-311	0
	횡성군	618	755	485	371	457	-246	86
경기	가평군	319	295	413	341	193	22	-148
	고양시	1,960	1,898	1,198	1,174	1,279	-785	104
	과천시	210	238	225	130	99	-80	-31
	광명시	1,830	1,469	9,056	5,456	4,964	3,626	-492
	광주시	864	799	754	360	403	-503	42
	구리시	451	360	260	212	308	-239	96
	군포시	732	810	849	660	586	-72	-74
	김포시	1,530	1,210	699	358	459	-1,172	101
	남양주시	1,047	1,265	889	686	767	-361	81
	동두천시	138	287	175	113	78	-25	-36
	부천시	1,010	1,815	1,123	737	819	-273	82
	성남시	1,689	1,623	914	532	508	-1,157	-24
	수원시	1,706	1,704	1,149	20	1,209	-1,686	1,189
	시흥시	1,885	1,498	1,355	1,065	1,099	-820	34
	안산시	2,001	1,289	1,240	786	812	-1,215	26
	안성시	611	692	541	463	320	-148	-143
	안양시	1,176	1,181	824	701	709	-475	9
	양주시	1,303	1,495	977	798	857	-505	59
	양평군	746	903	383	333	287	-413	-46
	여주시	538	601	361	252	275	-286	23
	연천군	242	200	60	88	81	-155	-6
오산시	1,191	1,227	554	216	230	-975	14	
용인시	1,640	1,683	1,414	1,315	1,253	-324	-62	
의왕시	329	238	231	224	132	-106	-92	
의정부시	875	581	418	277	273	-597	-5	

광역시	기초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감액 ( '25-'22)	증감액 ( '26-'25)
	이천시	165	196	260	242	270	78	28
	파주시	1,625	1,598	1,303	989	759	-636	-229
	평택시	952	1,054	1,092	977	931	25	-46
	포천시	430	730	457	288	312	-142	25
	하남시	1,217	1,069	762	474	570	-743	96
	화성시	61,723	61,470	28,844	27,789	23,012	-33,934	-4,776
경남	거제시	665	609	383	256	415	-409	159
	거창군	346	306	127	38	35	-309	-3
	고성군	288	201	145	100	41	-188	-59
	김해시	1,927	1,793	1,076	318	382	-1,609	64
	남해군	234	277	63	5	33	-229	28
	밀양시	442	468	71	74	168	-368	95
	사천시	572	461	261	26	126	-546	99
	산청군	448	440	250	98	65	-350	-33
	양산시	861	759	279	72	275	-790	204
	의령군	191	159	84	1	25	-191	24
	진주시	939	959	500	13	195	-926	182
	창녕군	251	136	15	0	0	-251	0
	창원시	8,657	3,673	1,547	456	1,101	-8,201	645
	통영시	318	546	186	33	22	-285	-12
	하동군	238	287	164	135	159	-103	25
	함안군	348	371	63	73	90	-276	17
	함양군	254	203	92	14	24	-240	10
	합천군	165	221	128	20	25	-145	5
경북	경산시	1,147	1,103	621	103	56	-1,044	-47
	경주시	2,486	1,842	568	43	44	-2,442	0
	고령군	270	206	48	26	15	-245	-11
	구미시	2,039	2,014	1,122	135	175	-1,905	40
	군위군	329	449	-	-	-	-	-
	김천시	931	798	343	25	15	-906	-10
	문경시	1,017	1,284	659	10	10	-1,007	0
	봉화군	400	191	94	25	25	-375	0
	상주시	995	1,114	267	85	47	-910	-38
	성주군	649	490	134	27	27	-622	0
	안동시	3,209	2,699	1,107	67	555	-3,142	488
	영덕군	785	820	82	0	0	-785	0
	영양군	0	0	0	0	0	0	0
	영주시	2,369	2,509	1,245	381	390	-1,988	9
	영천시	759	879	294	81	97	-678	16
	예천군	410	708	150	0	0	-410	0
	울릉군	237	123	0	0	0	-237	0
	울진군	383	389	128	27	32	-355	4
	의성군	2,054	2,005	772	217	23	-1,838	-194
	청도군	643	463	169	50	69	-593	19
청송군	384	293	16	16	16	-368	0	
칠곡군	1,147	592	188	0	0	-1,147	0	

광역시	기초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감액 ( '25-'22)	증감액 ( '26-'25)
	포항시	4,670	4,207	1,107	196	103	-4,474	-93
광주	광산구	2,085	2,475	1,792	1,023	82	-1,061	-941
	남구	1,374	1,163	556	275	29	-1,098	-246
	동구	1,444	1,840	1,178	689	235	-755	-454
	북구	3,380	3,024	2,076	1,221	64	-2,159	-1,157
	서구	1,232	1,544	1,206	763	96	-469	-667
대구	군위군	-	-	28	10	17	-	7
	남구	1,879	1,189	423	22	122	-1,857	100
	달서구	2,285	1,892	579	521	487	-1,764	-35
	달성군	1,190	1,517	538	67	34	-1,124	-33
	동구	2,227	1,872	455	133	251	-2,094	118
	북구	1,909	1,553	557	17	141	-1,892	124
	서구	492	649	364	70	56	-422	-14
	수성구	1,479	1,302	411	292	204	-1,187	-88
	중구	2,144	1,722	393	30	222	-2,113	191
대전	대덕구	1,645	1,222	328	30	143	-1,616	114
	동구	1,008	1,057	415	20	90	-988	70
	서구	2,866	3,051	1,268	65	231	-2,800	165
	유성구	2,896	3,001	1,306	53	167	-2,843	114
	중구	686	649	243	11	103	-675	92
부산	강서구	1,280	942	243	22	2	-1,259	-20
	금정구	1,258	1,155	393	64	10	-1,194	-54
	기장군	615	842	353	50	30	-565	-20
	남구	1,130	1,019	531	12	5	-1,118	-7
	동구	590	618	140	44	29	-546	-15
	동래구	642	638	94	2	0	-640	-2
	부산진구	1,377	1,361	843	2	0	-1,375	-2
	북구	1,019	1,057	288	71	15	-947	-56
	사상구	315	664	500	31	4	-284	-27
	사하구	272	261	156	19	1	-253	-18
	서구	403	407	145	22	0	-381	-22
	수영구	782	829	628	45	28	-737	-17
	연제구	834	843	289	64	26	-771	-38
	영도구	14	42	42	32	10	18	-22
	중구	274	245	125	2	0	-272	-2
해운대구	1,304	1,202	793	35	40	-1,269	5	
서울	강남구	1,367	817	363	166	259	-1,201	93
	강동구	1,457	1,071	371	309	500	-1,148	190
	강북구	497	553	422	371	480	-126	109
	강서구	1,126	1,097	450	110	58	-1,015	-52
	관악구	1,244	1,232	357	305	344	-939	39
	광진구	977	654	223	107	274	-870	167
	구로구	760	653	305	299	667	-461	368
	금천구	1,003	1,093	293	20	413	-983	393
	노원구	2,603	2,351	589	369	307	-2,234	-62
도봉구	1,446	601	136	65	63	-1,381	-3	

광역시	기초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감액 ( '25-'22)	증감액 ( '26-'25)
	동대문구	454	427	35	20	33	-434	12
	동작구	1,909	1,164	467	67	57	-1,841	-10
	마포구	1,086	1,271	755	232	707	-855	476
	서대문구	1,049	850	56	20	213	-1,029	193
	서초구	913	1,157	828	700	824	-212	124
	성동구	3,533	6,286	7,809	6,870	1,737	3,337	-5,133
	성북구	1,045	1,181	644	592	588	-452	-5
	송파구	844	818	503	103	440	-741	337
	양천구	742	579	90	21	30	-722	9
	영등포구	2,766	1,214	120	0	0	-2,766	0
	용산구	570	867	313	270	475	-300	204
	은평구	3,651	2,873	1,595	1,329	1,503	-2,322	173
	종로구	626	704	240	198	6	-428	-192
	중구	1,322	1,047	449	48	38	-1,274	-9
	중랑구	537	583	233	150	373	-387	223
울산	남구	1,832	1,564	439	28	28	-1,804	0
	동구	762	1,277	948	45	72	-717	27
	북구	1,885	1,593	325	4	54	-1,882	50
	울주군	1,809	1,916	728	154	114	-1,655	-40
	중구	1,573	1,398	398	2	52	-1,571	50
인천	강화군	925	920	555	373	434	-552	61
	계양구	582	473	44	12	39	-570	27
	남동구	2,033	2,125	884	12	590	-2,020	577
	동구	202	268	167	189	227	-14	38
	미추홀구	1,957	1,533	625	34	357	-1,923	323
	부평구	1,209	1,169	377	104	429	-1,106	325
	서구	2,788	2,615	1,285	352	885	-2,437	533
	연수구	1,937	1,648	565	0	283	-1,937	283
	옹진군	235	355	72	0	146	-235	146
	중구	1,068	945	498	266	132	-802	-134
전남	강진군	193	304	84	58	0	-135	-58
	고흥군	491	815	446	382	58	-109	-324
	곡성군	658	759	538	116	153	-542	37
	광양시	973	1,023	800	410	631	-563	221
	구례군	134	147	108	33	123	-102	90
	나주시	1,661	1,586	1,028	272	584	-1,388	312
	담양군	547	513	262	80	111	-466	31
	목포시	2,168	1,135	696	147	419	-2,021	272
	무안군	896	918	746	200	319	-696	119
	보성군	314	433	247	133	20	-180	-113
	순천시	3,248	3,465	1,753	731	793	-2,517	62
	신안군	143	132	556	2,451	1,282	2,307	-1,169
	여수시	2,455	2,462	1,927	1,401	1,276	-1,054	-125
	영광군	903	949	340	261	337	-642	76
	영암군	147	533	406	160	254	13	94
완도군	327	393	204	101	190	-226	89	

광역시	기초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감액 (‘25-‘22)	증감액 (‘26-‘25)
	장성군	776	936	535	124	308	-652	185
	장흥군	546	468	262	143	96	-403	-47
	진도군	243	180	40	40	20	-203	-20
	함평군	267	286	218	20	166	-247	146
	해남군	1,348	1,144	798	399	350	-949	-49
	화순군	452	406	202	71	286	-382	216
전북	고창군	892	934	548	302	279	-590	-23
	군산시	4,224	2,655	1,455	645	740	-3,579	95
	김제시	1,321	1,332	512	393	583	-929	191
	남원시	1,427	1,829	1,284	851	813	-577	-38
	무주군	539	391	140	80	133	-459	52
	부안군	450	463	320	454	403	4	-50
	순창군	371	432	297	114	82	-257	-33
	완주군	2,733	2,687	2,075	1,572	1,724	-1,161	152
	익산시	3,014	2,387	1,042	626	709	-2,389	83
	임실군	433	743	231	196	425	-237	229
	장수군	252	411	447	379	374	127	-4
	전주시	9,511	9,866	3,189	2,663	1,454	-6,848	-1,209
	정읍시	1,103	1,181	583	562	623	-541	61
	진안군	512	647	271	287	377	-225	91
충남	계룡시	252	219	129	10	0	-242	-10
	공주시	990	756	487	118	139	-872	21
	금산군	266	273	64	57	88	-209	31
	논산시	184	960	545	631	540	447	-91
	당진시	587	700	319	249	305	-339	57
	보령시	174	189	28	40	34	-134	-6
	부여군	652	560	181	244	133	-408	-110
	서산시	406	221	326	182	146	-223	-36
	서천군	248	204	55	27	47	-221	20
	아산시	1,258	165	80	85	262	-1,173	177
	예산군	565	441	212	31	179	-534	148
	천안시	1,895	2,063	1,258	799	1,042	-1,096	244
	청양군	955	3,715	1,252	365	337	-589	-28
	태안군	827	622	293	232	343	-594	110
홍성군	947	657	101	43	111	-903	68	
충북	괴산군	198	325	89	5	81	-193	76
	단양군	109	43	4	4	4	-106	0
	보은군	572	439	139	12	49	-560	37
	영동군	538	419	332	0	95	-538	95
	옥천군	374	374	156	21	163	-353	142
	음성군	365	336	0	0	85	-365	85
	제천시	3,510	2,934	493	41	315	-3,469	274
	증평군	130	166	30	20	28	-110	8
	진천군	173	250	52	0	95	-173	95
	청주시	2,661	3,274	869	103	1,098	-2,558	994
충주시	865	1,152	143	0	208	-865	208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 현장토론

좌장

한양대학교 김종걸 교수



<MEMO>

<MEMO>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 종합토론

## 토론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권영우 과장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이정윤 과장



<MEMO>

<MEMO>

<MEMO>

<MEMO>